예산 규모도 모르는데 어떻게 '동서화합' 큰 그림 그리나

朴정부 '동서통합지대' '10+α' 문제점은

SOC 지원 없고 구체적 예산·프로젝트 빠져

과거 정부 수차례 실패한 계획 그대로 답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서통합지대'와 '10+α 중추 도시권 육성전략'은 지역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대규모 사회간접시설(SOC) 지원 약속이 없고, 구체적 예산·프로젝트가 빠져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전남도는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에 한려대교와 목포~부산간 KTX 건설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려대교(예산 1조1770억원)는 여수 상암동~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간 15.4㎞(해상교량 4.4㎞)를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이다.

목포~부산 철도고속화 사업도 호남 소외의 상징이었던 '경전선' 전남 구간을 손보는 것이다. 지난해 말 마산~진주(43.9㎞) 개통으로 등 경남 구간은 모두 복선전철화를 완료했지만 전남 구간은 지난해 순천~광양(8㎞)이 복선전철화 했을 뿐 다른 구간은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 SOC 지원은 동서통합지대 기본 구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국토해양부에서 처음 열린 '동서통합지대 추진을 위한 관계관 회의'에서 국토부는 남해안 KTX와 한려대교 건설 등은 기본 구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구체적 예산지원·프로젝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전남도와 경남도가 기본구상도 짜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예산 규모를 모르니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꼴이다.

낙후 지역이 많은 전남으로서는 '10+α' 정책도 달갑지 만은 않다. 전남도는 현재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부권 등 3곳의 중추도시권을 예상하고 있지만 함평 등 전남 중부 지역이 소외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이들 프로젝트는 과거 정부에서 실패했던 남해안선벨트와 5+2 광역경제권의 관박이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일선 지자체에서는 벌써 "예산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서통합지대에 포함된 구례, 광양, 순천, 여수, 고흥 등지는 남해안선벨트의 남중권에 포함돼 '섬진강 100리길' 등의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당시 국회의원 79명이 발의한 '지역화합특별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입법화가 무산되는 등 동서화합을 주제로 한 이들 지역의 개발은 과거에도 수차례 거론됐지만 실행되지 못한 프로젝트다.

'10+α'도 16개 광역시도 체제를 충청·호남·대구 경북·동남·수도권 등 7개 권역으로 통폐합해 지방의 역량을 지방정부 수준으로 높인다던 '5+2 광역 경제권'과 유사하다. '5+2'가 광역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면, '10+α'는 하나의 도시를 허브로 정해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함께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확한 예산 규모와 지원 약속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들 사업들도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남해안선벨트 등 과거 정부의 실패한 프로젝트를 답습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 제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차별' 광양항 물동량 13.5% 급감

부산항은 전년보다 늘어

정부의 부산항 중심 항만정책 속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광양항의 지난달 항만물동량이 전년 대비 13.5%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현정부 들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부산항은 전국 항만의 물동량 감소에도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양항 총 물동량은 1809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하는 등 국내 주요 항만 물동량이 2.7% 줄었다. 광양항에 이어 포항항(4%), 인천항(2.6%), 울산항(1.6%) 등의 물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항 물동량이 큰 폭으로 준 것은 원유와 석유 등 유류 수입 감소와 석유정제품, 철강, 화공생산품 등의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항만 물동량 감소 속에서도 차량 수출이 늘고 있는 평택·당진항이 16.3%의 증가세를 보였고, 부산시 등이 '해양경제특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의 물동량은 2790만t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컨테이너 처리 실적도 부산항과 광양항의 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부산항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54만5000TEU를 처리했지만 광양항은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한 17만300TEU를 처리하는데 그쳤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상하이, 홍콩 등에 이은 세계 5위 수준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방 공약 빠진 '공약 가계부' 확정 연기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 필패" 여당조차 반발

내용 대폭 수정 … 새 가계부 마련할지는 미지수

정부가 여당과 지방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공약가계부 확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의 신규 SOC 건설 등 대선공약을 반영한 새로운 공약가계부를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과 함께 135조 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확정지으려 했으나 전날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 보고 시 나타난 비판과 이후 이어진 지방의 반발 때문에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애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재부의 공약가계부안을 최종 보고한 뒤 확정할 계획이었다.

전날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현 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약 135조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공약 가계부'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약가계부를 확정한 뒤 빠르면 바로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같이 애초 정부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야당 지도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비롯한 지방공약 예산이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 재원대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공약가계부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데다 영·호남 등 지방으로 비판이 확산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실상 신규 SOC 투자를 막는 '공약 가계부안' 대로라면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필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새누리당 지도부의 우려는 청와대에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영·호남의 주요 일간지도 이 부분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이날자 신문에 내보냈다.

이처럼 정부가 공약가계부 확정을 미뤘지만 내용을 대폭 수정해 지방공약을 제대로 반영한 공약가계부를 만들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과 청와대의 일반적 관측이다. 새누리당에 보고된 기재부의 공약가계부안은 "SOC·산업 분야 지출의 비중이 감소하고 복지·교육·문화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박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언급이 공약가계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했다.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된다.

인수위 안과 비교할 때 전체 과제 건수는 똑같지만 문화 분야 과제를 3개 추가한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건수를 3개 줄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정책은 '국민행복' 국정기조에 포함된 '사회통합' 추진전략에 포함됐으나 내용은 인수위안과 같았다.

또 문화융성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로 부상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 한국스타일의 창조'가 국정과제에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이번 최종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인수위 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용어를 되살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 SOC 사업 획일적 삭감 … 또 다른 호남 차별"

민주 광주·전남·전북 위원장 '공약 가계부' 강력 비판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 이춘석 전북도당 위원장은 28일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공약 가계부'와 관련, '사실상의 또 다른 호남 차별'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 충실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각 부처별로 15% 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SOC 지출을 5년 동안 12조원 감액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는 전형적인 미봉책"이라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자 증세와 법인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정부의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SOC 사업 예산 편성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기존 범위 내에 유지돼야 한다"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급히 착공되어야 할 호남지역 SOC 사업들이 획일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또 다른 호남 차별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